

라틴아메리카 노동시장 및 노동정책의 현황과 전망

Carlos Salas (브라질 캠피나스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Christian Caldeira (브라질 캠피나스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 서론

지난 15년이라는 정치주기 동안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국가에서 진보세력이 집권하였다. 동시에 역대 일부 국가에서는 신자유주의가 지배적인 경제정책 기조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이러한 추세는 역전되어 현재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 라틴아메리카의 경제대국에는 신자유주의 정부가 집권하고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 각국의 직업구조, 노동 소득, 노동정책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크나큰 변화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라틴아메리카 노동시장 및 노동정책의 진화 과정을 분석한다. 이하에서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최근에 나타난 경제변화 및 역대 공존하는 다양한 경제발전 경로를 설명한다. 이어서 노동시장 및 인구 대다수에 해당되는 소득 분배의 전반적인 변화를 살펴본 후 주요 노동시장 정책 및 노동시장 규제의 주요 변화를 돌아본다. 마지막으로 라틴아메리카 노동시장 및 노동정책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총론과 함께 역대 주요 국가들에서 최근에 있었던 노동규제 변화의 영향을 전망해본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데이터는 라틴아메리카 전반에 대한 것이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차별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고자 역대 3대 경제대국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에 중점을 두고 분석한다. 하지만 이 3개국의 동향이 역대 전반적인 동향의 좋은 표본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라틴아메리카 지역 전체에 대한 몇 가지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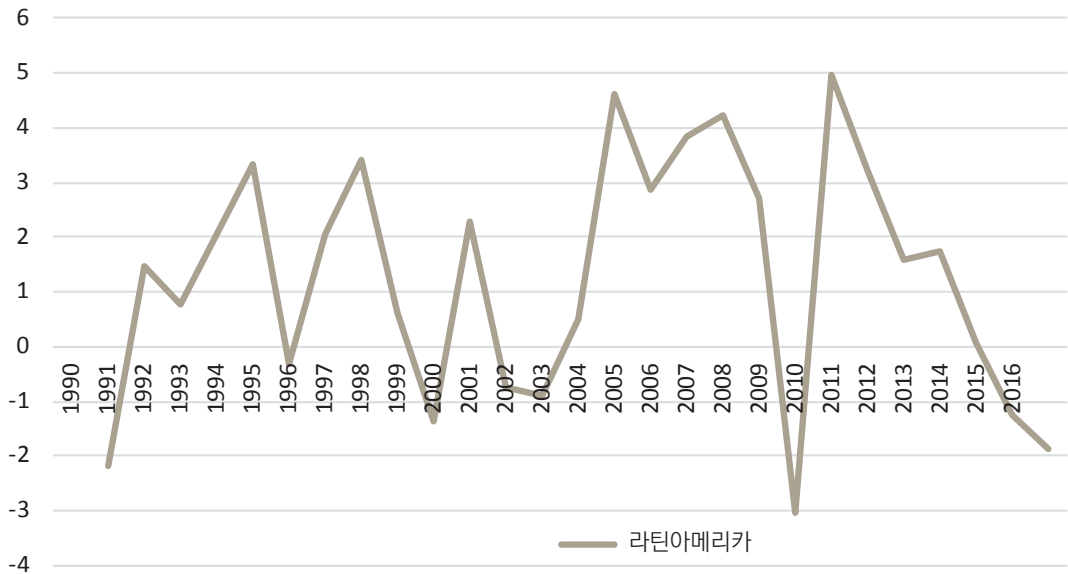
반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¹⁾

■ 주요 경제 동향: 경기, GDP 성장률, 원자재, 수출입 등

1990년대 경제위기와 성장을 거둬하던 라틴아메리카는 2000년대 초반 성장세를 회복했다. 이 시기 두드러진 특징은 라틴아메리카 전반에 걸쳐 나타난 인구성장세 둔화와 결합된 성장경로의 회복이다. 그 결과 [그림 1]과 같은 패턴이 나타났다.

이 시기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전반적으로 보수정권과 교조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 득세하던 지역에 진보정부가 들어서고 진보 정책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바뀌었다 (Cornia, 2010; Panizza, 2005). [그림 1]에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성장세와 그 이후

[그림 1] 라틴아메리카 1인당 GDP 성장률(1990~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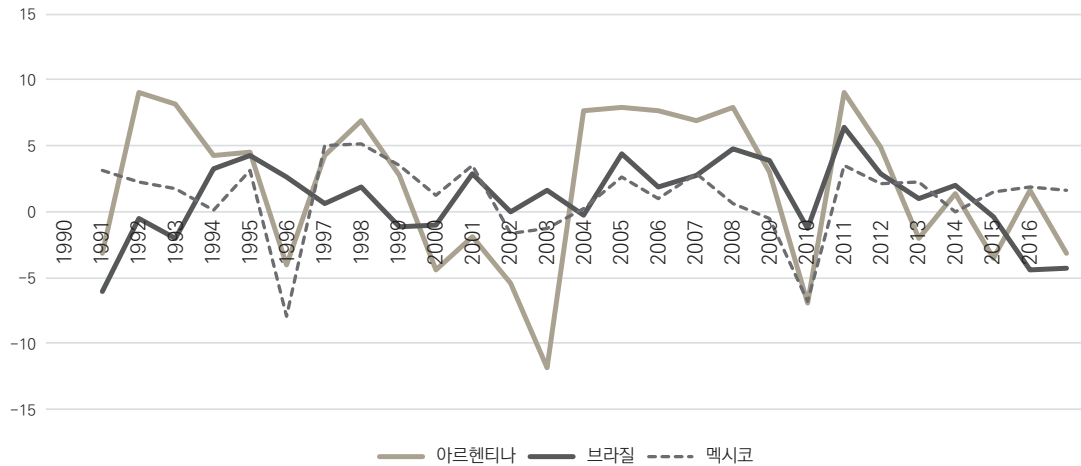


1) 라틴아메리카 노동 동향의 변화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은 신자유주의 지향 정책 그룹과 개발정책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Manzano & Salas(2017) 참조.

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나타나 있다. 2008년 이후 성장세가 회복되어 2016년까지 지속되었으며 그 후 다시 역내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장 둔화를 겪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전반적인 추세는 경제규모의 차이뿐만 아니라 역사, 역내 경제협력 현황, 글로벌 경제와의 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역내 개별 국가들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라틴 아메리카 경제대국들의 궤적은 상대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2 참조). 간혹 보이는 큰 차이는 2000년대 초 아르헨티나의 경제충격이나(Bértola & Ocampo, 2010), 2016년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등 국가 차원의 특이적 사안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그림 2]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의 1인당 GDP 성장률(1990~2016년)



소비진작을 위한 신용확대, GDP 성장을 위한 정부투자, 일자리 증가, 적극적 최저임금 정책 등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베네수엘라의 성장 촉진에 도움이 된 정책들이다 (Weisbrot, 2015). 이러한 정책기조는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등 보다 시장지향적인 나라들과 대조되는데, 이 국가들은 성장이 경제 전반에 고르지 않은 특징을 보인다. 이들의 경우 기업식 농업(agribusiness)과 수출산업뿐만 아니라 광업 및 채굴업이 GDP 성장을 견인하면서 각국의 성장세가 글로벌 경기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동안 제조업이 수출을 주도하던 브라질에서도 2009년 이후 기업식 농업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국가에서 원자재 수요 및 가격 변동이 핵심적인 변수로 떠오르게

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몇 년간 지속되었다(Burchardt and Dietz, 2014). 라틴아메리카의 채굴업 및 농산물 수출 증가 현상은 콜롬비아, 칠레, 에콰도르, 페루의 GDP 성장세를 설명하지만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의 성장은 설명하지 못한다. 후자의 경우 제조업과 거대한 내수시장이 GDP 성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실제로 각국 국민계정 데이터를 보면 라틴아메리카 전반에 걸쳐 2003~2014년 성장세의 가장 큰 동력은 최종소비지출 증가였음을 알 수 있는데(ECLAC Statistical Yearbook 2017, Table 2.1.119), 이는 경제성장에서 내수시장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다(Moreno-Brid and Garry, 2016).

■ 노동시장 성과 : 노동시장 구조, 노동소득, 비공식 부문, 일자리 창출, 성별 노동시장 구조 및 소득 격차, 소득 분배와 빈곤

아래에서는 2000년대 라틴아메리카를 신자유주의 지향적 국가와 개발 지향적 경제정책을 펼친 국가로 나누어 각각 대표적인 일부 국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일자리 창출은 각국의 GDP 성장 궤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²⁾ 여기서 국가별 동향을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같은 석유수출국은 수출을 통한 자금 유입의 결과로 고용 성장이 나타났다. 그 외 칠레나 페루와 같은 원자재 교역국의 경우 철강에 대한 외부수요 증가가 고용증가세와 연관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칠레의 경우 농업 관련 수출이 고용 증가세를 뒷받침한다. 페루는 수출 촉진을 위한 인프라 건설이 건설 부문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쳤다. 멕시코의 고용창출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로 인해 미국 경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이로 인해 멕시코의 고용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타격을 입었다. 이와는 정반대로 브라질은 2015년까지 신용공급 증가, 기타 소득 관련 정책에 따른 소비 증가에 힘입어 일자리 창출이 크게 늘었다. 이에 비해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2003년 이후 내수 진작책에 힘입은 바 크다(Weisbrot, 2015; Salas and Santos,

2) 2007~2008년 금융위기의 영향과 역내 정치경제 변화의 영향을 보여주기 위해 이 글에서는 최근 기간을 선택했다.

2011). 우루과이의 경우 2004년에 좌파 성향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입한 경제사회정책들이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을 이어가는 데 일조했다(Reclat(2017)의 국가별 연구 참조).

<표 1>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산업별 고용

(단위:천 명)

국가	경제활동	2012	2014	2015	2016
아르헨티나	합계	15,663	15,674		
	농업	477	319		
	산업	3,743	3,848		
	서비스	11,375	11,416		
브라질	합계	89,165	91,850	91,726	89,505
	농업	10,247	9,524	9,393	9,111
	산업	20,513	21,013	20,322	18,674
	서비스	58,374	61,294	61,996	61,696
칠레	합계	7,626	7,903	8,028	8,115
	농업	761	743	753	769
	산업	1,817	1,856	1,869	1,867
	서비스	5,047	5,304	5,406	5,478
콜롬비아	합계	24,476	25,500	26,154	26,350
	농업	4,197	4,064	4,135	4,177
	산업	5,037	5,031	5,131	5,063
	서비스	15,235	16,401	16,886	17,107
멕시코	합계	48,707	49,415	50,611	51,595
	농업	6,623	6,751	6,744	6,710
	산업	11,612	12,161	12,633	13,186
	서비스	30,028	30,107	30,834	31,312
페루	합계	16,952	17,185	16,952	17,243
	농업	4,651	4,817	4,791	4,893
	산업	2,887	2,813	2,809	2,797
	서비스	9,413	9,555	9,352	9,553
우루과이	합계	1,563	1,654	1,648	1,645
	농업	134	151	145	135
	산업	330	347	337	330
	서비스	1,098	1,155	1,166	1,180
베네수엘라	합계	12,571	13,190	13,206	
	농업	963			
	산업	2,752			
	서비스	8,269			

자료 : ILO Stat.

<표 2>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고용비중 변화 추이(농업, 산업, 자영업, 무급종사자/비농업 부문 여성)

(단위: %)

국가	부문	2005	2008	2012	2016
아르헨티나	농업	1.1	1.2	3.1	2
	산업	23.5	23.9	23.8	24.8
	자영업, 무급종사자	21.4	19.1	18.6	23.6
	비농업 부문 여성	45.1	44.1	43.6	-
브라질	농업	20.5	17.4	15.3	15.2
	산업	21.4	22.6	21.9	21.5
	자영업, 무급종사자	28.4	25.2	-	31.9
	비농업 부문 여성	46.7	-	47.2	-
칠레	농업	13.2	11.7	10.3	9.6
	산업	23	23.5	23.4	22.9
	자영업, 무급종사자	27	24.4	-	27.8
	비농업 부문 여성	34.4	36.2	38.5	-
콜롬비아	농업	21.4	17.9	17.6	13.6
	산업	20.3	20	20.7	16.6
	자영업, 무급종사자	45.4	47	48.8	50.4
	비농업 부문 여성 고용	47.4	47.5	45.6	-
멕시코	농업	14.9	13.1	13.4	13.5
	산업	25.5	25.5	24.1	25.2
	자영업, 무급종사자	31	29.2	-	31.7
	비농업 부문 여성	39.1	39.4	40	-
페루	농업	32.9	27.5	25.8	24.8
	산업	14.6	17.2	17.4	17.6
	자영업, 무급종사자	51.9	48.5	47.8	50.5
	비농업 부문 여성	32.5	34.7	37.6	-
우루과이	농업	4.6	10.8	10.9	8.8
	산업	21.9	21.4	21.1	20.5
	자영업, 무급종사자	24.7	23.4	-	27.5
	비농업 부문 여성	48.8	-	48.2	-
베네수엘라	농업	9.7	8.5	-	11.6
	산업	20.8	23	-	26.4
	자영업, 무급종사자	31.2	30.5	32.8	42.1
	비농업 부문 여성	41.6	41.6	48.1	-

자료: 세계은행, WDI 데이터베이스.

각 국가별 고용구조를 보면 보다 명확한 그림을 볼 수 있다(표 2 참조). 2000년대 전반에 걸쳐 라틴아메리카의 교역량 증가에 따른 영향이 각 국가별 수출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수출 수요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각 나라별 자영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처럼 자영업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나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자영업은 보통 ‘비공식 부문 활동’으로 지칭하는 영세 사업장과 더불어 빈곤 감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임금근로자 교섭여건 개선 등에 큰 한계로 작용한다(Jansen, Peters, & Salazar(2011) 제4, 5장 및 ECLAC(2017) 참조).

〈표 2〉에서도 볼 수 있듯이 총고용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별 편차가 크다. 페루와 콜롬비아는 농업 고용,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크다. 이 두 부문에서 생산성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고 무역 개방을 통해 자영업자나 그 가족들이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칠레의 경우 콜롬비아 화훼 수출 부문과 같이 농업 부문의 생산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의 대부분이 자영업자에게는 거의 기회가 되지 않는다.

실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각국 노동시장의 발전 정도에 따라 다르고, 노동시장은 다시 전반적인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Salas, 2003) 이 글에서는 국가별 실업률은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경제구조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는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칠레(양극화 수준은 비교적 낮지만)와 같은 국가들의 경우 실업률이 경제적 기회의 유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자영업의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시점에 대한 국가별 비교분석을 실시하면 각국 경기와 연관성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국가 간 실업을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Salas & Santos(2011)에서도 논의했듯이 브라질과 멕시코의 실업률을 예로 들 수 있다. 멕시코의 경우 실업률이 낮은 이유는 금전적 소득이 필요한 잉여 인구를 흡수하는 자영업과 영세사업장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브라질의 경우에는 실업보험과 상대적으로 발전한 노동시장이 있기 때문에 멕시코에 비해서는 실업률이 전반적인 경제여건을 잘 반영한다.

임금 및 최저임금

이 글에서 살펴보는 국가들 중 멕시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2000년대에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졌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임금 인상이 나타났는데, 경제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 덕분에 이들 국가의 평균 임금이 두드러지게 상승한 것이다. 멕시코와 콜롬비아는 이 글에서 분석한 국가들 중 임금 상승률이 가장 낮았고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정책은 비임금 근로자의 소득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가별 임금 정책이 미친 또 하나의 영향은 바로 불평등 감소이다. 브라질의 경우 일부 사회 보장 분담금이 최저임금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중요한 승수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브라질은 경제위기에 이어 소프트 쿠데타 등 혼란이 이어지면서 2015년 이후 최저임금이 하락하게 되었다.

<표 3>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평균임금(연간 데이터, 2010=100)

국가	2002	2008	2011	2014	2016
아르헨티나 ¹⁾	46.6	79.3	116.4	165.8	-
브라질	98.7	96.3	101.4	108.8	107.6
칠레	85.3	93.4	102.5	111.9	115.4
콜롬비아	91.6	96.1	100.3	104.5	104.5
멕시코	93.4	101.9	100.8	101.7	104.1
페루 ²⁾	97.7	100	108.4	117.9	119.8
우루과이	87.1	90.2	104	115.4	119.1
베네수엘라	130.2	112.1	103	-	-

주: 1) 2010~2014년 데이터는 CPI 추정치 문제로 과대평가.

2) 2004년 이전의 페루 데이터는 최근 데이터와 엄격한 비교가 어려움.

자료: CEPAL, <http://interwp.cepal.org/sisgen/ConsultaIntegrada.asp?idIndicador=341&idioma=e>

2003~2015년 라틴아메리카 경제성장의 가장 가시적인 결과로 지니 계수로 나타나는 불평등이 감소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가구 규모 축소, 일자리 증가, 임금 인상, 빈곤 개선 정책(현금이전제도) 등 다양한 요소의 종합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이지만 상당수의 논문이 이러한

현상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려 시도했다. 이러한 논문에서는 지니 계수 개선에 있어 구체적인 사회경제정책의 영향을 배제하고(이에 대한 논의는 Montecino(2012) 참조) 교육수준 상승을 하나의 설명변수로 포함한다. 그러나 이미 살펴보았듯이 소득 불평등과 빈곤 완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노동소득이다(Rani & Furrer, 2016; Zepeda, Alarcon, Soares, & Osório, 2009).

<표 4>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지니 계수

국가	2001	2002	2003	2006	2012	2014	2015	최초, 최후 데이터간 변화율
아르헨티나	0.533	0.538	0.535	0.483	0.425	0.427	-	10.6
브라질	0.593	0.586	0.58	0.559	0.527	0.515	51.3	8
칠레	-	-	0.547	0.518	-	-	47.7	7
콜롬비아	0.578	0.583	0.544	0.601	0.535	53.5	51.1	-6.7
멕시코	-	0.495	-	0.48	0.481	48.2	-	1.3
페루 ¹⁾	0.518	0.54	0.537	0.517	0.451	44.1	44.3	6.7
우루과이	0.462	0.467	0.462	0.472	0.413	41.6	41.7	4.5
베네수엘라	0.482	0.506	0.504	0.469	0.411	-	-	7.2

주: 1) 2004년 이전의 페루 데이터는 이후 데이터와 엄격한 비교는 어려움.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베네수엘라는 CEPAL 자료를 토대로 2012~2013년 조정 수치.

불평등이 개선되면서 빈곤이 감소했는데, 특히 극빈층이 줄어들었다. 빈곤 수치는 국가별로 다른 빈곤선의 정의에 따라 다르지만, 데이터를 표준화시키면 완만하긴 하지만 유사한 경향이 나타난다(ECLAC, 2017). 또한 빈곤 감소가 메르코수르(Mercosur)³⁾ 국가들에서 더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번에도 역시 멕시코는 유독 성과가 부진했다.

조건부 현금이전제도는 극빈층 감소에 도움이 되었지만 일자리 창출 사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결국 빈곤감소 효과를 지속하려면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여러 계량경제분석에서 빈곤감

3) 편집자 주: 1991년 출범한 라틴아메리카의 지역통합체인 남미공동시장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가 정회원이다.

소에 있어 고용과 소득 증대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추정되었다(Zepeda, Alarcon, Soares, & Osório, 2009).

■ 노동정책 및 제도의 발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대부분 신규 구직자 교육훈련제도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포함한 임금결정제도의 중요성이 다른 정책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노동법도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산성 증대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노동정책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근로자들의 교섭력으로 결정되며 이러한 교섭력을 이용해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서 창출되는 잉여가치에서 큰 몫을 차지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다(Härring & Douglas, 2012: Chapter 5). 노동자의 교섭력은 또한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 및 노조 조직률과 연관된다. 최근 ECLAC(2017) 분석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요소 모두 메르코수르 국가들과 베네수엘라에서 높은 수치를 보인다. 상대적으로 신자유주의 지향적인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에서는 그 수치가 더 낮다. 노조 조직률이 낮은 현상은 콜롬비아나 멕시코의 경우와 같이 산업구조의 발전 미비 또는 반노동적인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두 변수의 수치와 추이는 정부정책의 영향을 받는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2015년까지 친노동 정책 기조를 유지한 바 있다.

<표 5>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노조 조직률

(단위: %)

국가	2003	2008	2009	2012	2013
아르헨티나		37.7			
브라질	20.6	22.2	19.1	17.5	16.6
칠레	14.1	15	15.8	15.3	15
콜롬비아					6.5
멕시코	16.9	15.7	15.3	13.6	13.6
페루			4.4	4.2	
우루과이			16.6		30.1

자료: ILO Stat, 2018.1.20 접속.

노동정책:노동법 및 규제의 변화

최근 몇 년간 라틴아메리카에는 콜롬비아에서 시작해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까지 노동개혁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각 국가마다 노동법의 특성은 다르지만 이들의 노동개혁을 관통하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기존에 없던 유연한 형태의 노동계약, 다양한 임금지급 방식, 하청의 일반화 추세 등이다. 다음으로는 브라질, 칠레, 멕시코 주요 3개국의 노동법 개혁 내용과 영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브라질의 노동법 개혁은 1988년 헌법에 포함된 사회·노동보호구조를 해체하고 근로자들의 교섭 여건을 악화시키려는 광범위한 시도의 일환이다.

2017년 의회를 통과한 브라질 노동법 개혁안은 주요 사용자단체인 전국산업연맹(포르투갈어로 CNI)에서 작성한 제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기업별 노사합의가 노동법에 우선함,’ ‘유연 계약, 특히 간헐적 계약의 허용,’ ‘근로자의 노동법원 접근권 제한,’ ‘노조 조직화 및 재원 마련’의 네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사항은 1940년대부터 구 노동법에서 보장한 노동권을 대체하여 사용자들이 ‘협상’을 통해 퇴행적인 근로 규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이다. 이러한 새 조건은 사전 협의나 교섭 없이 개별 고소득자에게도 바로 적용될 수 있다.

간헐적 노동계약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시 보유하면서도 실제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한다. 이러한 형태의 노동계약에서 유희시간에 대한 보상이 없으며, 현재 영국에서 그렇듯이 호출 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기존 노동법하에서 근로자들은 사건의 승패소와 무관하게 노동법원에 무료로 제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은 근로자가 노동법원에서 패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의 사건에서 브라질 최대 은행의 한 직원이 퇴직금 및 기타 수당의 지급을 요구했다. 노동개혁 훨씬 전에 재판이 시작되었고 최종 판결에서 해당 직원은 일부 보상에 대한 부분적 권리를 인정받고 일부는 기각되었다. 그 결과 7,500헤알을 지급받게 되었지만 개정법이 적용되면서 소송 비용으로 75,000헤알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

기존 노동법하에서 노조는 산업별 지역노조 형태로 조직되었고 노조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전체 근로자가 하루 임금을 노동세로 의무적으로 납부하였다. 개정법은 노동세 납부의무를

폐지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지역노조와 별개로 사업장별로 근로자들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노조대표제도를 도입했다.

칠레에서는 1973년 9월 11일 아옌데 정부가 퇴진하면서 노동자들에게는 모호한 시기가 시작됐다. 1930년대부터 도입된 노동법의 성과로 노조 조직화를 통해 개별 노동자와 노동계급의 권리를 보장해왔던 칠레에서 아옌데 대통령 이후 집권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부정권이 단순 칙령으로 이러한 보호들을 모두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1979년에 ‘노동계획’이라는 것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단일 기업 단위에서의 단체교섭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자체를 제한하였으며 노조 결성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또한 노동계획은 근로자 해고에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는 동시에 퇴직금에는 제한을 두었다. Pérez Ahumada(2017)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노동계획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려는 시도는 무위로 돌아갔다.

이렇게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서 고용불안이 급증했다. Arellano and Gamonal(2017)은 이렇게 설명한다. “2013년 기준으로 칠레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4,705,027명(가사 도우미 및 공기업이 아닌 기업의 근로자 포함) 중 1,086,162명에 해당하는 상당수의 칠레 근로자가 최저임금 또는 그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 또한 민간부문 근로자 74%의 소득이 357,000칠레페소(2013년 기준 760미국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다. 칠레는 생활비가 높은 나라이다. 2015년 최저임금은 241,000칠레페소(2015년 11월 기준 337미국달러)이다. 사회복지급여를 고려하지 않고 보면 이는 하루 빵 1킬로그램, 출퇴근용 차표 2장, 월세 180달러인 작은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수준이다.”

칠레의 사례는 노동자 대다수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반하는 노동법을 예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실히 보여준다.

2012년에 통과된 멕시코의 새로운 노동법에서 도입한 근로규제 방식은 근로기준의 내실화에 기여하기보다는 외주화, 하청, 불안정한 노사관계, 노조 약화, 제도적 후퇴, 자본 및 노동이동성의 변화, 임금 유연성 증가를 통해 고용유연성을 강화한다. 즉 멕시코 노동개혁은 외주계약, 초기 및 계절별 교육 및 유연임금제 등 불안정한 고용방식을 도입하는 노동유연화의 수단이 되었다. 또한 이런 불안정한 근로형태하에서 시급제도 합법화, 임금체납, 주된 일자리의 업무 추가,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승진형태 도입 등의 방법으로 인건비를 낮춘다. 특히 무제한적 외주화를 합법화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권리에 실질적인 위협을 주고 있는데, 해고를

당했을 경우 근로자들이 노동쟁의를 통해 권리를 보장받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 결론

21세기 첫 15년간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이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소득분배가 개선되었고 빈곤 감소, 일자리 기회 증가 등이 동반되었다(멕시코만 예외, UNDP(2013) 제6장 참조). 그 결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에서는 노동계급의 사회적 여건에도 중요한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라틴아메리카 정치에 변화가 나타나 경제정책 기조가 급진 보수주의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최저임금 실질 인상, 노동법, 전반적인 경제정책 분야에서 그동안 이룬 사회적 발전이 상당 부분 후퇴하고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극빈층이 증가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부정적 변화는 경제성장 둔화, 노동 부족 심화, 빈곤 악화 등 전반적인 환경 악화와 겹치며 보수정책의 영향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KLI**

참고문헌

- Bértola, L., & Ocampo, J. a.(2010), *Desarrollo, vaivenes y desigualdad: Una historia económica de América Latina desde la independencia*, Madrid: SEGIB.
- Burchardt, H. J., & Dietz, K.(2014), “(Neo-)extractivism - a new challenge for development theory from Latin America”, *Third World Quarterly* 35(3), pp.468-486, <https://doi.org/10.1080/01436597.2014.893488>
- Cornia, G. A.(2010), Income Distribution under Latin America’s New Left Regimes.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and Capabilities* 11(1), pp.85-114, <https://doi.org/10.1080/19452820903481483>
- ECLAC(Economic Commision for Latin AMerica)(2017), Social Panorama of Latin America, ECLAC, Santiago.
- Häring N. and N. Douglas(2012), *Economists and the Powerful*, Anthem Press, London.
- Jansen, M., R. Peters & J. Salazar(Eds.)(2011), *Trade and Employment: From Myths to Facts*, Geneva: ILO, Retrieved from http://www.ilo.org/employment/areas/trade-and-employment/WCMS_162297/lang--en/index.htm
- Manzano, M. and C. Salas(2017), “Emprego e desigualdade em dois blocos de países da América Latina: Histórias de sucesso ou a repetição do pesadelo para o trabalho?”, in Salas et al., *Trabalho e regulação em perspectiva comparada*, Editorial Ufscar, São Carlos., pp.23-48.
- Montecino, J. A.(2012), “Decreasing Inequality under Latin America’s ‘Social Democratic’ and ‘Populist’ Governments: Is the Difference Real?”,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42(2), pp.257-275, <https://doi.org/10.2190/HS.42.2.g>
- Moreno-Brid, J. C., & S. Garry(2016), “Economic performance in Latin America in the 2000s: recession, recovery, and resilience?”, *Oxford Development Studies* 818(February), pp.1-17, <https://doi.org/10.1080/13600818.2015.1127907>
- Panizza, F. E.(2005), “The Social Democratisation of the Latin American Left”, *Revista*

Europea de Estudios Latinoamericanos Y Del Caribe/European Review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udies (79), pp.95–103, <https://doi.org/papers2://publication/uuid/94F28A32-463B-4365-AF5D-2A59EF82859E>

- Pérez Ahumada, P.(2017), *Business, workers, and the class politics of labor reforms in Chile, 1973–2016*,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Diego.
- Rani, U., & M. Furrer(2016), *Decomposing income inequality into factor income components: Evidence from selected G20 countries*, Retrieved from http://www.ilo.org/global/research/papers/WCMS_499918/lang--en/index.htm
- Redlat(2017), <http://www.redlat.net/site/blog/trabalho-decente-na-america-latina/>, accessed January 20, 2018
- Salas, C.(2003), “Trayectorias laborales entre el empleo, desempleo y las microunidades Mexico”, *Papeles de Población* 9(38), pp.121–157, Retrieved from <http://www.redalyc.org/resumen.oa?id=11203804>
- Salas, C., & A. Santos(2011), Diverging paths in development: Brazil and Mexico, *International Journal of Labour Research* 3(1), pp.115–133.
- UNDP(2013), *Social Protection, Growth and Employment Evidence from India, Kenya, Malawi, Mexico and Tajikistan. Social Protection, Growth and Employment*, New York: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